

# 주간 통일정세

2017-36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9.2	北 김정은, 軍 청년동맹 행사 참가자와 기념사진...김원홍 또 등장(연합뉴스)
		"리용호 北외무상 유엔총회 기조연설, 25일로 예정"(연합뉴스)
		장준상 신임 北보건상, 몰디브 WHO 지역총회 참석(연합뉴스)
	9.3	수소탄두 공개 6시간 만에 감행...노동당 회의서 결정(연합뉴스)
	9.4	김정은 체제 핵개발 '핵심 2인' 홍승무·리홍섭 주목(연합뉴스)
		北, 주민에 '제재대비' 독려...김기남 "단결의 힘으로 짓부실 것"(연합뉴스)
	9.5	文 대통령 참석 러 동방경제포럼에 北도 대표단 파견(연합뉴스)
	9.6	국제사회에 6차 핵실험으로 '위협' 던진 北, 내부는 '평온'(연합뉴스)
		北, 국제사회 새 제재 움직임 속 경제성과 독려(연합뉴스)
北 핵개발 총책 홍승무, 대장 계급장 달고 등장(연합뉴스)		
9.7	北 '수소탄 성공' 경축행사...집회 열고 개발자 평양 초청(연합뉴스)	
	北, '위안부 문헌' 자료집 발간..."생존자 증언 위주"(연합뉴스)	
군사	9.3	수소탄, 핵융합 이용...일반 원자탄 수십~수백 배 폭발력(연합뉴스)
		역대최대 위력...軍전문가 "50kt 위력 평가"(연합뉴스)
	9.5	美 태평양함대사령관 "한반도에 항모강습단 등 지속 전개"(연합뉴스)
9.7	美 정보기관들 北 6차 핵시험 폭발력 140kt 추정(연합뉴스)	
	美 7공군사령관 "美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지지 안 해"(연합뉴스)	
경제	9.2	"北, 추가제재 대비 석유 100만 배럴 추진...年수입량 % 수준"(연합뉴스)
	9.4	러시아-북한 연결 '만경봉호' 취항 3개월여 만에 운항중단(연합뉴스)
	9.5	"北, 제재 피해 석탄수출지 동남아로 변경...아프리카 무기 제공"(연합뉴스)
	9.6	"베를린 북한대사관, 독일 정부 압력에 밀려 임대사업 종료"(연합뉴스)
	9.8	7월 북-미 교역 '0'...6개월째 전무(연합뉴스)
사회 문화	9.5	평양과기대 "美 대북여행금지에도 가을학기 예정대로 시작"(연합뉴스)
외교 국방	9.2	'미국인 北여행금지' 정식 발효...美국무부, 예외신청 절차 공시(연합뉴스)
		"北, 작년 유엔투표서 '美 국익안건' 반대·불참·기권"(연합뉴스)
		北, 제네바 군축회의서 "美 경거망동하면 더 강력한 대응"(연합뉴스)
	프로레슬러 출신 데이노키 의원, 北 정권수립기념일 방북 추진(연합뉴스)	
9.3	트럼프, NSC 긴급소집...美재무 "北과 거래시 우리와 거래 차단"(연합뉴스)	

	<p>“레이저로 北미사일 요격한다”…日, 연구비 900억 원 배정(연합뉴스)</p> <p>日 관방 “北핵실험, 중대하고 압박한 새로운 단계 위협”(연합뉴스)</p> <p>日, 자위대기 띄워 공기 중 방사성물질 채집나서(연합뉴스)</p> <p>러시아 당국 “北 인공지진 규모 6.4”(연합뉴스)</p> <p>러 외무부 “안보리 결의 과시적 무시…단호한 비난받아야”(연합뉴스)</p> <p>EU “北핵실험, 국제안보 위협…북, 핵·WMD·미사일 폐기해야”(연합뉴스)</p> <p>‘옛 절친’ 불가리아·루마니아도 신속·강력 규탄(연합뉴스)</p> <p>나토 “북, 위협·긴장조성 모든 행위 중단해야”(연합뉴스)</p> <p>덴마크, 북 핵실험 항의 전달 위해 北대사 조치(연합뉴스)</p> <p>伊 “北 강력 규탄…핵 개발 즉각 중단하라”(연합뉴스)</p> <p>‘사실상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도 북한 비난(연합뉴스)</p>
94	<p>美, 北에 군사대응 경고…“北전멸 군사옵션 있지만 바라지 않아”(연합뉴스)</p> <p>美 유엔대사 “北 김정은 전쟁 구걸…인내에 한계있다”(연합뉴스)</p> <p>크렘린궁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계획 없어”(연합뉴스)</p> <p>EU 상임의장 “北제재 강화할 준비됐다”(연합뉴스)</p> <p>싱가포르, 북 6차 핵실험 강력 규탄…외교채널 통해 전달(연합뉴스)</p> <p>대만도 北핵실험에 긴급 안보회의…정세 급변에 촉각(연합뉴스)</p> <p>G7 정상 “북핵, 세계평화에 유례없는 위협…핵 전면 폐기하라”(연합뉴스)</p> <p>北 핵실험에 이스라엘도 ‘화들짝’…“美, 선제타격해야” 주장도(연합뉴스)</p>
95	<p>美, 새 대북제재안 주내 안보리 제출…11일 표결 목표(연합뉴스)</p> <p>北 제네바 대사 “美 압박 계속되면 추가 방어조치 하겠다”(연합뉴스)</p> <p>北 외무성 “美 제재압박 책동에 우리식 대응방식으로 대답할 것”(연합뉴스)</p> <p>日 방위상 “북 핵실험 폭발력 당초 예상 넘어 120kt 추정”(연합뉴스)</p> <p>스위스 대통령 “북한과 국제사회 갈등 중재” 제안(연합뉴스)</p> <p>獨 정부, 北 6차 핵실험 항의 전달 위해 北대사 조치(연합뉴스)</p> <p>모게리니 “北에 최대치 경제·외교 압박 가해야…군사방식 안 돼”(연합뉴스)</p>
96	<p>백악관 “지금은 북한과 대화에 초점 맞출 시점 아니다”(연합뉴스)</p> <p>美 유엔대사 “안보리 새 제재, 미사일 자금줄 차단해야”(연합뉴스)</p> <p>中 매체들, 북핵 위기에도 노골적인 ‘북한 감싸기’(연합뉴스)</p> <p>日 “북핵실험 폭발력 히로시마 원폭의 10배 넘어서”(연합뉴스)</p> <p>日 아베 “北, 지금의 길로는 밝은 미래 없다…정책 바꿔야”(연합뉴스)</p>
97	<p>조선신보 “美 올바른 선택할 때까지 공격전 계속”(연합뉴스)</p> <p>“中 단속 강화로 북중 밀무역 사실상 마비”(연합뉴스)</p> <p>EU 외교·안보대표 “대북 독자 제재 강화할 것”(연합뉴스)</p>

9.8	美 “北 수소폭탄 실험”...“모든 옵션있다고 한 것 말장난 아니다”(연합뉴스)
	트럼프 “군사옵션 사용하면 북한에 아주 슬픈 날 될 것”(연합뉴스)
	北 단체 “美 南 강점 용납할 수 없어”(연합뉴스)
	‘北선박단속 군사력 사용, 김정은·김여정 제재 초강력대응 추진’(연합뉴스)
	멕시코, 북한 대사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추방 명령(연합뉴스)
“英 외무부, 北대사 초차·6차 핵실험 공식 항의”(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 일자	보 도 내 용	수 행 자	비 고
9.2	조선인민군 제4차 청년동맹초급단체비서 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사진	황병서	-
9.3	핵무기 병기화사업 지도	-	-
9.4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행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7. 9. 2.

##### ■ 北 김정은, 軍 청년동맹 행사 참가자와 기념사진...김원홍 또 등장(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군 제4차 청년동맹 초급단체비서 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참여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총대 청년 전위대회’를 소집했으며 참가자들에게 서한도 보냈고, 청년동맹 초급단체 비서들과 청년 일꾼들이 청년운동의 선봉에서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함.
- 중앙통신은 이번 행사에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군 총정치국 책임일꾼들이 참석했다고 소개했으며, 아울러 올해 초 우리의 국가정보원장 격인 국가보위상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지난 4월 재등장한 김원홍도 이날 행사에 참석함.

2017. 9. 3.

##### ■ 수소탄두 공개 6시간 만에 감행...노동당 회의서 결정(연합뉴스)

- 북한은 이날(3일) 오후 12시 30분(평양시간 12시)께 핵실험을 했는데, 이에 앞서 이날 오전 6시 30분(평양시간 6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소탄 등의 사진을 공개함.
- 김 위원장은 “핵무기연구소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마감단계의 연구개발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 돌격전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면서 ‘핵무기 연구 부문 앞에 나서는 강령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함.
- 결국 이 보도가 있고 정확히 6시간 만에 핵실험이 이뤄진 셈이며, 이런 태도는 이번 핵실험이 수소탄 실험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핵기술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9. 2.

## ■ “리용호 北외무상 유엔총회 기조연설, 25일로 예정”(연합뉴스)

- 이달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하는 제72차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현지시간 25일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리 외무상은 총회 기간인 이달 19~25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일반토의’(general debate)에서의 기조연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RFA는 자체 입수한 유엔 공보국의 ‘일반토의 잠정 명단’(provisional list of speakers)을 근거로 리 외무상의 연설이 일반토의 마지막 날인 25일 잡혀 있다고 밝힘.

## ■ 장준상 신임 北보건상, 몰디브 WHO 지역총회 참석(연합뉴스)

- 최근 임명된 북한의 장준상 보건상이 몰디브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역 회의 참석차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밝힘.
- 중앙통신은 이날 “장준상 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북한) 보건 대표단이 몰디브의 말레에서 진행되는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 지역 총회 제70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짧게 보도함.
- 지난 7월 11일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내각 인사를 통해 보건성 부상이던 장준상을 보건상에 임명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함.

2017. 9. 4.

## ■ 김정은 체제 핵개발 ‘핵심 2인’ 홍승무-리홍섭 주목(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핵개발 주역은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리홍섭 핵무기연구소 소장이며, 이들은 핵 개발 분야의 1인자와 2인자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이들은 6차 핵실험 직전 이뤄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무기 병기화 사업 현지지도를 수행한 것으로 4일 확인됐으며, 김 위원장은 이 시찰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탄두 형태 물체를 참관함.
- 정부 관계자는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핵무기 담당인 홍승무가 총사령탑이라면 2인자 격인 리홍섭은 실무 책임자”라며 “두 사람은 핵 개발 분야의 최고 핵심”이

라고 평가했는데, 실제로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1월 12일 열린 ‘수소탄 시험’ 공로자에 대한 당 및 국가 표창 수여식에서 홍승무와 리홍섭은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수여하는 훈장을 받음.

## 2017. 9. 5.

### ■ 文 대통령 참석 러 동방경제포럼에 北도 대표단 파견(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북한도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 조선중앙통신은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 정부 경제대표단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되는 제3차 동방경제연단(동방경제포럼) -2017에 참가하기 위하여 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보도함.
- 북한은 첫 회의가 열렸던 2015년에 대표단을 파견했고, 작년에는 포럼에 대표단을 보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참석하지 않자 러시아는 당시 ‘기술적인 이유’로 불참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다시 경제대표단을 보내 북러간 경제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 국제사회에 6차 핵실험으로 ‘위협’ 던진 北, 내부는 ‘평온’(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박봉주 내각 총리가 대인중기계연합기업소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등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했다고 보도함.
- 박봉주 총리는 지난 3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6차 핵실험 결정에 함께했는데, 세계를 놀라게 한 핵실험의 결정에 참여하고 바로 다음 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경제현장 시찰에 나선 것임.
- 또 북한 내각은 4일 타이베이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위해 옥류관에서 연회를 열었으며, 연회에는 최태복 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동당 부장, 내각 부총리, 체육상 등 고위간부들이 대거 참석함.

## 2017. 9. 7.

### ■ 北 핵개발 총책 홍승무, 대장 계급장 달고 등장(연합뉴스)

- 북한 핵 개발의 총책임자로 알려진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대장(별 4개)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등장했으며, 핵 개발의 2인자이자 실무 책임자인 리홍섭 핵무기연구소 소장은 상장(별 3개)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기여한 간부와 과학자들이 전날 평양으로 올라와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수소탄 시험 성공 축하 평양시 군민 경축대회에서 참석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함.
- 노동신문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서는 군복을 입은 홍승무와 리홍섭이 각각 대장과 상장의 계급장을 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홍승무와 리홍섭이 군복을 입고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파격적인 장군 계급장 수여가 지난 3일 진행한 6차 핵실험 성공에 따른 보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됨.

##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9. 7.

### ■ 北 '수소탄 성공' 경축행사...집회 열고 개발자 평양 초청(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의 완전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 군민 경축대회가 6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당·정·군 간부들이 행사장 주석단에 자리 잡았다고 전함.
- 집회에서 가장 먼저 연설자로 나선 박봉주 내각 총리는 6차 핵실험이 정권 수립일(9월 9일)을 맞아 이뤄졌다고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이고 전체 조선 인민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강조함.
- 박봉주는 “핵보유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는 더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오늘의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전환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 北, '위안부 문헌' 자료집 발간...“생존자 증언 위주”(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자체 문헌자료를 엮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7일 보도함.
- 북한 조선역사학학회 위원장인 조희승 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은 이날 조선신보에 게재한 글에서 “올해 5월 조선의 사회과학원 사회과학출판사에서는 ‘일제의 일본군 성노예 범죄와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규명 문헌자료집’을 세상에 내놓았다”고 밝힘.

- 조 연구원은 자료집이 ‘일본군 성노예 범죄’편과 ‘조선인 강제연행 범죄’편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가 1990년대~2000년대 초 발표한 고소장과 진상조사 보고서 등이 수록됐다고 소개함.

##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9. 4.

### ■ 北, 주민에 ‘제재대비’ 독려…김기남 “단결의 힘으로 짓부실 것”(연합뉴스)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용 수소폭탄 실험에 3일 성공했다고 주장한 이후 주민들에게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기 위한 단결과 각 부문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자 신문 2면에 이번 핵실험에 대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각 분야 인사와 주민들의 반응을 게재함.
- 김기남 부위원장은 ‘승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체조선의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일심단결을 천백 배로 다지고 단결의 힘으로 적들의 체제도 짓부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활로도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2017. 9. 6.

### ■ 北, 국제사회 새 제재 움직임 속 경제성과 독려(연합뉴스)

- 6차 핵실험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더 강한 제재 움직임에 북한이 경제성과를 부쩍 독려하고 주민들에게 체제 자신감 고취에 주력하는 모습임.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1면에서 양강도 삼지연군 재개발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의 건설성과를 소개하며 “창조와 혁신의 힘찬 동음은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제재·압살 책동을 짓부수며 자력갱생 대진군에 펼쳐나선 천만 군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고무를 안겨주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이날 여러 면을 할애해 6차 핵실험 성공 소식에 접한 각 분야의 근로자들이 “미국과 적대세력의 제재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겠다”며 더 높은 생산 성과 달성을 다짐하는 내용의 글들로 채움.

## 2. 군사

##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9. 3.

## ■ 수소탄, 핵융합 이용...일반 원자탄 수십~수백 배 폭발력(연합뉴스)

- 북한이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로 장착할 ‘수소탄’을 개발하기 위해 단행한 6차 핵실험에서 성공했다고 주장해 이 폭탄의 위력과 북한의 개발 진도에 관심이 쏠림.
- 핵무기의 일종인 수소폭탄은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결합할 때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한 무기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의 핵분열 반응을 이용한 원자폭탄보다 수십~수백 배 강한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짐.
- 이날 북한 핵무기연구소가 6차 핵실험 관련 성명에서 이번에 실험한 핵무기를 ‘2단 열핵무기’로 언급하고 ‘분열 기폭 및 고온 핵융합 점화’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이같은 수소폭탄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첫 수소폭탄 실험을 주장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수소탄을 ICBM에 탑재하기 위한 핵실험에서 성공했다는 주장까지 내놓은 것임.

## ■ 역대최대 위력...軍전문가 “50kt 위력 평가”(연합뉴스)

- 군 전문가들은 이번 규모 5.7의 핵실험의 폭발위력을 50kt(1kt는 TNT 1천t) 정도로 평가했는데,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배 이상의 폭발위력이며 이는 지난해 5차 핵실험 때보다 5배 이상 큰 폭발위력의 실험임.
- 군의 한 전문가는 이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감지된 인공 지진 규모 5.7을 폭발위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50kt 정도로 평가한다”고 밝혔으며, 50kt은 TNT 5만t이 폭발했을 때 위력과 같음.
- 이 전문가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은 TNT 1만 6천t, 나가사키 원폭은 2만 1천t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6차 핵실험 위력은 나가사키 원폭의 2배 이상 규모”라고 말함.

2017. 9. 7.

## ■ 美 정보기관들 北 6차 핵시험 폭발력 140kt 추정(연합뉴스)

- 미국 정보기관들은 지난 3일 실시된 북한 핵시험의 폭발력을 140kt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매트가 6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매체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최신 평가에 정통한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이번 제6차 시험에서 “진전된 핵폭발 장치”가 이용된 것은 맞지만 원자탄의 폭발력을 높인 증폭 핵분열탄인지 북한이 주장하는 2단계 열핵폭탄(수소탄)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고 덧붙임.

- 북한의 제6차 핵시험 폭발력 추정치는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60kt에서 500kt 이상으로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가운데 노르웨이 지진연구소(NORSAR)는 120kt을, 중국과학기술대학 지진 실험실 원롄싱(溫聯星) 교수 연구팀은 108kt을 제시했으며, 일본 정부는 당초 70kt에서 120kt으로 수정한 데 이어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의 지진 규모 수정치를 바탕으로 160kt으로 더 올려 잡았고, 한국 국방부는 50-70kt의 당초 추정치를 아직 수정하지 않고 있음.

## 나. 한국 및 미국

2017. 9. 5.

### ■ 美 태평양함대사령관 “한반도에 항모강습단 등 지속 전개”(연합뉴스)

-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력을 지휘하는 스콧 스윙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은 5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자산을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 스윙프트 사령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우리 해군과 해양전략연구소, 해로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기조연설문에서 태평양함대사령부가 한반도 주변 해역을 지배해온 전통을 잇고 있다며 “우리는 항모강습단, 원정강습단, 이지스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잠수함 전력, F-35(스텔스 전투기), P-8(해상초계기), MH-60R(해상작전헬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함.
- 스윙프트 사령관은 “우리는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긴밀히 작전을 통합함으로써 압도적인 탄도미사일방어(BMD)와 대잠수함전(ASW)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함.

2017. 9. 7.

### ■ 美 7공군사령관 “美,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지지 안 해”(연합뉴스)

- 토머스 버거슨 미 7공군사령관은 7일 미국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 버거슨 사령관은 이날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 협력 비전’을 주제로 열린 ‘서울안

보대화 2017' 행사에서 토론자로 나서 “미국은 최근의 북한 핵실험에 따른 (한국 내) 정서를 물론 이해하지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함.

- 버거슨 사령관은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전략적 안보확약, 말하자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걸로 아마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함.

### 3. 경제

#### 가. 정책 및 주요조치

2017. 9. 2.

##### ■ “北, 추가제재 대비 석유 100만 비축 추진…年수입량 ⅔ 수준”(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비해 지난 4월 석유 100만 톤(t)을 비축하는 목표를 세운 것이 확인됐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2일 보도함.
- 이는 원유와 석유제품 연간 수입량의 절반~3분의 2 수준에 해당하는데, 도쿄신문은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전함.
- 이런 결정이 내려진 뒤 평양에서는 문을 닫는 주유소가 심각하게 늘어나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으며, 휘발유 가격의 상승세는 이후 한동안 진정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북한 당국이 시장에 대한 석유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나. 경제 실태

##### ■ 특이사항 없음

####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9. 4.

##### ■ 러시아-북한 연결 ‘만경봉호’ 취항 3개월여 만에 운항중단(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해상 화물·여객선(화객선) ‘만경봉호’가 운항 개시 3개월여 만에 멈춰 섰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지난 5월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이를 오가는 정기노선 운항을 시작

- 했던 만경봉호는 블라디보스토크항 부두 업자와의 상업 분쟁으로 더 이상 운항을 못 하게 된 것으로 알려짐.
- 만경봉호 운영을 맡은 러시아 해운회사 ‘인베스트스트로이트레스트사’의 블라디미르 바라노프 사장은 “만경봉호 운항이 중단됐다”면서 “현재 배가 나진항에 정박해 있는데 언제 운항이 재개될지 얘기하기 어렵다”고 밝힘.
  - 보도에 따르면 만경봉호가 이용하는 블라디보스토크항 부두 임대회사인 ‘블라디보스토크 해상 터미널’사는 인베스트스트로이트레스트가 100만 루블(약 2천만원)의 채무를 변상하지 않음에 따라 운항사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음.

### 2017. 9. 5.

#### ■ “北, 제재 피해 석탄수출지 동남아로 변경…아프리카 무기 제공”(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대북제재를 피해 석탄 수출지를 중국에서 동남아로 바꾸고 아프리카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함.
-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중간보고서(작년 11월 제재결의 관련)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뒤 북한은 석탄 수출 대상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으로 변경했는데, 북한은 작년 12월~지난 5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수출이 금지된 석탄과 철광석 등의 자원을 해외에 판매해 최소한 2억 7천 157만 달러(약 3천 73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임.
- 아프리카에서는 북한 관계자가 앙골라와 우간다의 대통령궁 경비대와 군, 경찰 등에 훈련을 실시한 사례도 있었음.

### 2017. 9. 6.

#### ■ “베를린 북한대사관, 독일 정부 압력에 밀려 임대사업 종료”(연합뉴스)

-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발을 맞춘 독일 정부의 지속적 압력에 밀려 대사관 건물 임대사업을 끝낸다고 5일(현지시간) 독일 언론이 보도함.
- 공영 ARD 방송과 시사주간지 슈피겔 온라인판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대사관은 최근 세입자인 독일 호스텔 운영업체(EGI GmbH)에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함.
- 독일 외무부 당국자는 “이런 (대사관 건물 임대) 관행을 끝내는 일과 관련해 추가 진전이 이뤄졌다”고 답변하며 사실임을 확인해줬다고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은 전함.

2017. 9. 8.

■ **7월 북미 교역 '0'...6개월째 전무(연합뉴스)**

- 미국과 북한 간의 교역이 7월에도 전혀 없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는데,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7월 중 북미 간 교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월 이후 북미 교역은 6개월째 전무한 상황이며 올해 북한과 미국의 교역액은 1월 2천 660달러로, 이마저도 전액 미국의 대북 수출임.
- 올해 상반기에는 그동안 대북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품목'이 전혀 없었음.

#### 4.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라. 사회 동향

2017. 9. 5.

■ **평양과기대 “美 대북여행금지에도 가을학기 예정대로 시작”(연합뉴스)**

- 북한 유일의 사립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가 미국의 대북 여행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예정대로 가을학기를 시작했다고 5일 밝힘.
- 평양과기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자국민 대북여행제한 조치와 한반도 주변의 긴장고조에도 9월 4일 월요일로 원래 계획한 날짜에 가을학기를 시작했다”고 전함.

- 대학은 미국 정부의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조치가 지난 1일 정식 발효됐다면서 “평양과기대는 통상 학기당 60~80명의 외국 교수진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설명했으며, 이어 “북한 국적 교직원들의 협조로 학기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켰다”며 “학기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교원이 합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5.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7. 9. 2.

#### ■ ‘미국인 북여행금지’ 정식 발효…美국무부, 예외신청 절차 공시(연합뉴스)

- 미 정부의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조치가 1일(현지시간) 정식 발효되었으며, 미국 여권을 가진 일반인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방북이 국익과 관련 있거나 취재,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국무부에서 예외 사례로 인정받아야 함.
-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여행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발표했는데, 신청지는 우선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분증, 연락처 등과 함께 자신의 여행이 국익 목적임을 명시하는 설명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국무부는 신청자가 방북 자격을 갖췄는지 검토 후 공지하게 되고, 이를 통과하면 신청지는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 단수여권을 취득했다는 서한을 받게 되지만 거부됐다고 진정을 내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 ■ “北, 작년 유엔투표서 ‘美 국익안건’ 반대·불참 기권”(연합뉴스)

- RFA는 최근 미국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7년 유엔투표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유엔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요하다고 분류한 모든 안건에 미국과 반대로 투표한 유일한 유엔 회원국이 북한이라고 전함.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총 99건의 유엔 총회 투표에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밝힌 투표가 67건이었고, 북한은 미국 정부의 국익과 직접 연관된 14건에 모두 반대하거나 불참·기권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은 팔레스타인 권리위원회, 핵무기 폐기, 핵무기 사용금지, 핵실험 금지, 이스라엘 인권조사, 시리아 인권 등 11건에 미국과 반대쪽으로 투표했으며, 이 밖에 무기거래조약, 임의적 처형반대 관련 투표는 참여하지 않았고, 화학무기 금지와 관련한 투표는 기권함.

■ **北, 제네바 군축회의서 “美 경거망동하면 더 강력한 대응”(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 “(미국이) 경거망동한다면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2일 “조선(북한) 대표단이 8월 30일 제네바 군축회의 3기 회의 전원 회의에서 최근 성과적으로 진행된 우리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발사와 관련하여 조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전면 배격하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함.
- 북한 대표단은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관련, “우리는 이미 미국의 행태를 지켜볼 것이라는 의미 있는 경고를 하였으며 미국은 이에 호전적인 침략전쟁 연습으로 대답하였다”고 주장함.

2017. 9. 3.

■ **트럼프, NSC 긴급소집…美재무 “北과 거래시 우리와 거래 차단”(연합뉴스)**

- 미국은 3일(현지시간)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미국과 경제적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 “북한의 경제적 단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며, 그는 “포괄적인 제재안을 성안해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북한과 무역을 하거나 사업거래를 하는 어느 누구도 우리와 무역 또는 사업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우리는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고,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같은 언급은 북한과의 불법 거래는 물론 합법적인 거래까지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작지 않음.

2017. 9. 4.

■ **美, 北에 군사대응 경고…“北전멸 군사옵션 있지만 바라지 않아”(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보회의(NSC)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꿈을 포함한 미국의 영토,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응은 효과적이면서 압도적일 것”이라고 말함.
- 이어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전멸(total annihilation)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많은 군사적 옵션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임.
- 매티스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서 각각의 군사옵션을 일일이 보고 받기를 원했다”고 밝혀, 미국이 군사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논의했음을 내비침.

#### ■ 美 유엔대사 “北 김정은 전쟁 구걸…인내에 한계있다”(연합뉴스)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4일(현지시간)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전쟁은 결코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함.
- 헤일리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헤일리 대사는 “2006년(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점진적인 제재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북한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며,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때만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선 “더욱 진전되고 어느 때보다 위험해졌다”고 평가함.

2017. 9. 5.

#### ■ 美, 새 대북제재안 주내 안보리 제출…11일 표결 목표(연합뉴스)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4일(현지시간)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 헤일리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주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뒤 다음 주 월요일(11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처럼 신속한 미국의 새 제재결의와 표결 추진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 **北 제네바 대사 “美 압박 계속되면 추가 방어조치 하겠다”(연합뉴스)**

-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틀 뒤인 5일(현지시간)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 추가로 자위적 방어조치를 하겠다며 국제사회의 비판에 맞대응함.
- 한대성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은 뒤 “최근 방어 차원의 조치는 미국에 주는 선물”이라면서 미국이 계속 무자비한 압박을 행사하면 추가로 ‘선물’을 보내겠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이 미국의 적대 정책과 핵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지난 3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탄 실험이 성공했다며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되풀이함.

■ **北 외무성 “美 제재압박 책동에 우리식 대응방식으로 대답할 것”(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우리식 대응방식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가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놓고 미국이 앞장에서 규탄 놀음을 벌리며 반공화국 체재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은 우리가 선택한 병진의 길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정상적인 공정으로서 그 누구도 흐지부지할 수 없다”고 주장함.

2017. 9. 6.

■ **백악관 “지금은 북한과 대화에 초점 맞출 시점 아니다”(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 해법과 관련해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출 시점이 아니다”고 밝힘.
-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 및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북한과의 대화는 백악관의 초점이 아니다”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트럼프 정부의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더 안전하고 비핵화된 한반도를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美 유엔대사 “안보리 새 제재, 미사일 자금줄 차단해야”(연합뉴스)**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헤일리 대사는 이날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초청강연에서 “더 많은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북한의 행동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전함.
  - 이는 새로 추진되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됨.

2017. 9. 7.

■ **조선신보 “美 올바른 선택할 때까지 공격전 계속”(연합뉴스)**

- 북한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바꾸는 선택을 할 때까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함.
- 조선신보는 이날 ‘마지막 완성단계에 들어선 조선의 핵무력 건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미국의 숨통을 조이는 (북한의) 단호한 공격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함.
-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며 “조선(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강화를 떠들어대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함.

2017. 9. 8.

■ **美 “北 수소폭탄 실험”…“모든 옵션있다고 한 것 말장난 아니다”(연합뉴스)**

-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익명을 전제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이번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없었다”고 말함.
- 다만 그는 “우리는 아직 이번 핵실험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이번 핵실험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임.
- 잠정적인 평가임을 전제하긴 했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번 6차 핵실험의 성격을 수소폭탄 실험으로 규정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트럼프 “군사옵션 사용하면 북한에 아주 슬픈 날 될 것”(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셰이크 사바 알 아마드 알 사바 쿠웨이

- 트 국왕과 정상회담을 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해 “군사적인 루트로 가지 않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군사 행동은 옵션(선택지)이 분명하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군사력이 지금보다 더 강한 적은 없었다”면서 “만약 북한에 그것(군사행동)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날은 북한에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그러나 “군사행동이 불가피하냐”고 물은 뒤 “불가피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답해, 선뜻 군사옵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군사행동을 제외한 다른 압박 수단을 먼저 취할 것”이라며 “분명히 그것은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음.

#### ■ 北 단체 “美, 南 강점 용납할 수 없어”(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남 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 지배가 계속되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종식되지 않는 한 남조선 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은 언제 가도 불행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며 “우리 민족은 더이상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한 불행과 고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담화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자위권 행사’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미국은) 극도로 첨예한 정세를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우리가 절대적 힘을 틀어쥐으로써 조선반도(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구도가 완전히 변화되고 미국 본토 자체의 안전도 담보될 수 없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미국은 대세의 흐름과 우리의 전략적 지위를 똑똑히 보고 남조선에 있는 저들의 고용병들의 운명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나. 북·중 관계

2017. 9. 6.

#### ■ 中 매체들, 북핵 위기에도 노골적인 ‘북한 감싸기’(연합뉴스)

-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중국이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없다며 노골적

- 으로 ‘북한 감싸기’에 나서고 있음.
- 중국 전문가와 관영 매체들은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북한의 거침없는 행보에도 북한의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 특히 국제사회의 원유 공급 중단 등 중국에 대한 대북 압박 요구를 의식한 듯 대북 제재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2017. 9. 7.

■ “中 단속 강화로 북중 밀무역 사실상 마비”(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 사이 압록강 일대에서 성행했던 밀무역이 중국 당국의 단속강화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현지발로 7일 보도함.
-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소식통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단둥의 소규모 개인 밀수까지 중국 당국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조심스럽게 밀수를 해도 단속에 걸리고, 이런 모습에 다른 밀수업자들도 자포자기하고 있다”고 밝힘.
- 소식통은 “압록강 변에 있던 밀수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가 들어갈 만한 길에는 모래와 돌을 쌓아 차가 들어갈 수 없게 막았다”면서 “단둥 지역의 밀수선 또한 사실상 운항이 중단됐다”고 최근 달라진 현지상황을 설명함.

다. 북·일 관계

2017. 9. 2.

■ 프로레슬러 출신 이노키 의원, 北 정권수립기념일 방북 추진(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2일 관계자를 인용해 이노키 의원이 북한의 정권수립기념일(9일)이 포함된 오는 7~11일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이노키 의원은 6일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이동한 뒤 7일 평양에 들어가 방북 기간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날 계획이며, 교도는 이노키 의원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함.
- 이노키 의원은 리 부위원장과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에 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전달할 것으로 보이며, 그는 방북 기간에 일본과 북한 간 스포츠 교류 촉진을 위해 북한 올림픽위원회 관계자와도 만날 계획임.

## 2017. 9. 3.

## ■ “레이저로 北미사일 요격한다”…日, 연구비 900억 원 배정(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고출력 레이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함.
- 함선과 항공기를 통해 고출력 레이저를 쏘서 발사 직후 ‘부스터(booster) 단계’의 미사일을 요격해 무력화하는 방식이며,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박격포탄과 소형무인기 등을 요격 대상으로 하는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 연구비로 87억 엔(약 912억 원)을 배정함.
- 일본 정부는 이미 2010년부터 고출력 레이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내년부터 5년간은 기초연구 단계를 넘어서 고출력 레이저를 장비화하는 연구를 할 계획임.

## ■ 日 관방 “北핵실험, 중대하고 임박한 새로운 단계 위협”(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말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상청의 관측, 그리고 그동안의 정보를 종합해서 북한이 오늘 핵실험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힘.
- 스가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중국 베이징 루트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한 말로 규탄했다”고 강조함.

## ■ 日, 자위대기 띄워 공기 중 방사성물질 채집나서(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은 3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대기 중의 먼지 채취 장치가 장착된 자위대 훈련기를 일본 주변 상공에 파견했다고 NHK가 전함.
- 방송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항공자위대 T4 연습기를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기지, 후쿠오카(福岡)현 지쿠조(筑城)기지, 이시카와(石川)현 고마쓰(小松)기지에서 이륙시킴.
- 이들 자위대 훈련기는 몇 시간 동안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지역 상공을 비행한 뒤 기지로 돌아오는데, 이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대기 중에 방사성 물질이 떠다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2017. 9. 5.

■ **日 방위상 “북 핵실험 폭발력 당초 예상 넘어 120kt 추정”(연합뉴스)**

-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5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의 폭발력(TNT 폭약 환산 기준)이 당초 추정했던 70kt(킬로톤)을 넘어서 약 120kt에 달할 수 있다고 말함.
- NHK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사무국이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의 규모를 초기에 5.8로 파악했던 것에서 잠정치지만 6.0으로 수정했다”며 “이것에 근거해 추산하면 폭발력은 약 120kt에 달하게 된다”고 밝힘.
- 앞서 오노데라 방위상은 CTBTO가 지진 규모를 수정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핵실험에 따른 폭발력이 더욱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바 있으며, 그는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오노데라 방위상은 “수소탄이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강화형 원자폭탄일 수도 있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함.

2017. 9. 6.

■ **日 “북핵실험 폭발력 히로시마 원폭의 10배 넘어서”(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6일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당시 폭발력(TNT 폭약 환산 기준)이 처음 추산했던 70kt을 넘어 160kt에 달하는 것으로 수정 발표했는데, 이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위력(약 15~16kt)의 10배를 넘는 것임.
-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방위성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기관에 의한 인공지진 규모(매그니튜드)의 최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추산했다”고 말함.
- 이는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사무국이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의 규모를 초기 5.8에서 6.0, 이어 6.1로 수정한 점을 고려한 것이며, 그는 “과거의 핵실험에 비해 진동이 매우 컸다”며 “수소탄 실험이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함.

■ **日 아베 “北, 지금의 길로는 밝은 미래 없다…정책 바꿔야”(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지금의 길을 계속 가면 밝은 미래가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함.
- 그는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및 한일, 한러 정상회의 참석 차 전용기 편으로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힘.
- 아베 총리는 “북한에 이를 이해시켜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현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연대해 가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함.

## 라. 북·러 관계

2017. 9. 3.

### ■ 러시아 당국 “北 인공지진 규모 6.4”(연합뉴스)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지질물리국 감차가 지부 관계자는 이날 타스 통신에 “자동지진측정기가 오늘 북한 지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을 포착했다”며 “이는 강력한 지진”이라고 설명함.
- 러시아 당국이 밝힌 지진 규모는 한국 당국이 밝힌 규모(5.7)보다 크게 높은 것임.
- 북한과 접경한 러시아 극동 연해주 기상청은 관내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진도 5.6의 지진이 느껴졌다고 전함.

### ■ 러 외무부 “안보리 결의 과시적 무시…단호한 비난받아야”(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도 3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 발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과시적 무시’라며 강하게 비난함.
-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휴일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히 내놓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수소폭탄 장치 실험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요구와 국제법 규정에 대한 또 다른 과시적 무시이며 가장 단호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함.
- 외무부는 “북한 지도부가 국제 비확산 체제 훼손을 겨냥한 행동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런 노선 지속은 북한 스스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함.

2017. 9. 4.

■ **크렘린궁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계획 없어”(연합뉴스)**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모임)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샤먼(廈門)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을 수행 중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대화할 계획이 없나’라는 언론의 질문에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함.
- 페스코프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을 논의했다면서 “두 지도자 모두 현 상황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함.
- 이어 “두 지도자는 한반도 혼란 방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당사국이 자제를 보이고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소개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9. 3.

■ **EU “北핵실험, 국제안보 위협…북, 핵·WMD·미사일 폐기해야”(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해 동북아와 국제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뒤 북한에 핵과 대량파괴무기(WMD),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함.
- EU에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실험해서는 안 된다는 북한의 국제적 의무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반이라면서 동북아와 국제안보에 대한 도발이고, 중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확산체제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라고 비판함.
-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EU의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북한은 핵과 대량파괴무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함.

■ **‘옛 절친’ 불가리아·루마니아도 신속·강력 규탄(연합뉴스)**

-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정부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어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함.
- 불가리아는 중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큰 북한 공관이 운영될 정도로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웠지만, 이날 북한의 중대 도발을 강한 어조로 신속하게 비판했으며,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주변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야기했다”고 우려함.
- 루마니아 외교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한반도를 유례없는 긴장국면으로 몰아갔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규탄했으며, “유엔 안보리와 IAEA 결의를 이행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중단하라고 북한에 강력한 호소를 거듭한다”고 밝힘.

#### ■ 나토 “북, 위협·긴장조성 모든 행위 중단해야”(연합뉴스)

- 유럽 안보를 담당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위협과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함.
-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이 오늘 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이번 핵실험은 2016년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비롯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함.
-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나토는 동북아 지역과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당국의 행동 패턴을 우려한다”면서 “북한 당국은 모든 현존하는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대화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 ■ 덴마크, 북 핵실험 항의 전달 위해 北대사 초치(연합뉴스)

- 덴마크 정부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 핵실험에 대한 덴마크 정부의 항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덴마크를 관장하는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를 초치함.
- 애너스 사무엘슨 덴마크 외교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날 실행된 북한의 핵실험과 앞서 여러 차례 이어진 탄도 미사일 발사를 언급한 뒤 “북한은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위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덴마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도록 최대한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힘.

#### ■ 伊 “北 강력 규탄…핵 개발 즉각 중단하라”(연합뉴스)

- 올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북한의 핵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함.
-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수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탈리아는 북한의 핵실험을 단호하며, 확고하게 비난한다”고 밝힘.
- 알파노 장관은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은 세계 평화와 안보는 물론 세계 비핵화 체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에 맞서 이탈리아는 해당 지역 국가들에 연대를 표현한다”고 덧붙임.

#### ■ ‘사실상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도 북한 비난(연합뉴스)

- 인도 외교부는 이날(3일)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개탄한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또다시 어긴 것은 크게 우려할 문제”라고 밝혔으며, “북한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이러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인도의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핵과 미사일 기술 확산도 우려한다”고 덧붙임.
- 파키스탄도 외교부 성명을 내고 “북한 핵실험을 비난한다”고 밝혔는데, 파키스탄은 그동안 “지속해서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모든 당사자가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함.
- 파키스탄은 다만 “모든 당사자가 극도의 자제심을 보이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고 말해 무력을 사용한 해결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냄.

2017. 9. 4.

#### ■ EU 상임의장 “北제재 강화할 준비됐다”(연합뉴스)

-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이번 핵실험은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대응으로 단합하도록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강력한 유엔 제재를 채택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더 강한 결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리스크가 너무나 커지고 있다”고 지적함.
- 또 북한을 향해서는 “핵과 대량파괴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 활동을 한 번에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함.

#### ■ 싱가포르, 북 6차 핵실험 강력 규탄…외교채널 통해 전달(연합뉴스)

- 싱가포르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이런 뜻을 북한에 전달하겠다고 4일 밝힘.
- 싱가포르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도발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함.
- 성명은 또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적대적인 행동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이어 “우리는 북한이 그런 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무를 지키라는 우리의 오랜 요구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임.

#### ■ 대만도 北핵실험에 긴급 안보회의…정세 급변에 촉각(연합뉴스)

- 4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전날 북한 핵실험 실시 2시간여만에 린취안(林全) 행정원장(총리)과 국가안전회, 국방부, 외교부, 국가안전국(NSC), 대륙위원회 수장 등을 소집해 긴급 안보회의를 열었음.
- 차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대만 정부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비판한다”며 “지역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조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차이 총통은 또 특별 전담팀을 꾸려 동북아의 급변하는 정세를 예의 주시토록 하고 관련국과 긴밀한 소통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만반의 대응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함.

#### ■ G7 정상 “북핵, 세계평화에 유례없는 위협…핵 전면 폐기하라”(연합뉴스)

- 이탈리아 ANSA통신에 따르면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를 비롯해 미국, 영국,

-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7개국 정상은 4일 내놓은 성명에서 “표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의 새로운 핵 실험을 규탄한다”고 밝힘.
- G7 정상들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자 세계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은 모든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확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함.
  - G7 정상들은 이어 “북한은 21세기에 핵실험을 자행한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의 최근 도발은 국제 사회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고 있으며, 세계 평화를 유례없는 수준으로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함.

#### ■ 北 핵실험에 이스라엘도 ‘화들짝’...“美, 선제타격해야” 주장도(연합뉴스)

- 이스라엘 정부와 주요 매체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난 3일부터 이틀 연속 북한의 핵실험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거나 해당 내용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음.
- 이스라엘 외무부는 북한 핵실험 다음날인 4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이스라엘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내고 북한 정권을 겨냥해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의 실험과 개발 중단을 촉구함.
- 외무부는 또 “이번 핵실험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 패턴의 연속”이라며 “북한은 이 사안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힘.

2017. 9. 5.

#### ■ 스위스 대통령 “북한과 국제사회 갈등 중재” 제안(연합뉴스)

- 4일(현지시간) 공영 RTS에 따르면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이날 베른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핵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돕기 위해 ‘중재자로서 훌륭한 봉사’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 로이타르트 대통령은 스위스가 과거 쿠바, 이란과 미국이 대치할 때 중재자로 나선 경험과 스위스군이 현재 관문점에서 중립국위원회의 일원으로 복무한다는 점도 언급함.
- 스위스 외무부도 이날 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 증진을 위한 모든 노력에 연대하겠다”고 말함.

#### ■ 獨 정부, 北 6차 핵실험 항의 전달 위해 北대사 초치(연합뉴스)

- 독일 정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독일 주재 북한 대사를 초치함.

- 슈테판 자이베르트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면서 이같이 밝힘.
-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 및 총선 TV토론 등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를 촉구함.

■ **모게리니 “北에 최대치 경제·외교 압박 가해야··군사방식 안 돼”(연합뉴스)**

-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4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관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결해서 북한에 최대한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모게리니 대표는 그러나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을 강조함.
-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모게리니 고위 대표는 이날 중부 및 남동부 유럽의 대표적 국제회의로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2017 블레드 전략 포럼(Bled Strategic Forum)’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EU 대외관계청(EEAS)이 5일 밝힘.

2017. 9. 7.

■ **EU 외교·안보대표 “대북 독자 제재 강화할 것”(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지난 3일 감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과 관련,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7일 밝힘.
-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모게리니 고위 대표는 이날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으며, “향후 며칠간 EU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장관들과 논의할 것”이라면서 “오늘 장관들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 강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힘.
- 모게리니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를 “세계 평화와 안보에 분명한 위협”이라고 규정함.

2017. 9. 8.

■ **‘北선박단속 군사력 사용, 김정은·김여정 제재’ 초강력대응 추진(연합뉴스)**

-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밀수 선박을 공해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초강력 대북제재가 추진되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지도부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될 전망이다.
- 6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F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14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에 회람함.
- 초안에는 안보리가 제재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화물용 선박을 상대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운항을 금지하고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기존에도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한 것임.

#### ■ 멕시코, 북한 대사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추방 명령(연합뉴스)

- 멕시코 정부는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72시간 이내에 자국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함.
- 멕시코 정부는 북한의 최근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함.

#### ■ “英 외무부, 北대사 초치…6차 핵실험 공식 항의”(연합뉴스)

- 영국 정부가 북한 대사를 초치해 6차 핵실험에 대해 공식 항의를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애나벨 골디 여당 원내총무는 5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영국 외무부는 오늘 영국주재 북한 대사를 초치해 (6차 핵실험과 관련해) 공식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힘.
- 골디 원내총무는 타릭 마무드 아마드 외무부 차관을 대신해 한반도 관련 성명을 낭독하며 “1990년대 수많은 북한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대기근 등 수십 년간 이어진 공산주의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핵폭탄 등을 제조하는데 자원을 탕진했다”고 비판함.

# Ⅲ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9.3		트럼프 “한미FTA 폐기 여부 내주 참모들과 논의하겠다” 파문 (연합뉴스)
	9.4	틸러슨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취할 것”...한미외교장관 통화(연합뉴스)	
		한미·한일 북핵대표 연쇄통화...‘단호한 대응’ 공감(연합뉴스)	
		한미 국장급 확장억제협의체 매년 개최...핵우산 논의 정례화(연합뉴스)	
	9.5	文대통령-트럼프, 미사일지침 탄두중량 제한 전격 해제 합의(연합뉴스)	
			트럼프 “한국에 수십억달러 무기판매 승인”...나홀간 2번 강조(연합뉴스)
		송영무, 美 태평양함대사령관 면담...“北에 실질적 군사대응” (연합뉴스)	
	9.6		美USTR 대표 “한미 FTA 관련 문제 다룰 개정협상 희망”(연합뉴스)
		한미일 국방당국 北핵실험 대응 화상회의...“최대한의 압박”(연합뉴스)	
	9.7	한미 국방장관 “北 도발억제 연합훈련·전략자산 정례배치 강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백악관 “한미FTA 폐기 논의 당분간 안해”...의회에 보고(연합뉴스)
	9.4	강경화, 왕이 중외교부장과 통화...북핵실험 대응 협의(연합뉴스)	
	9.6		중외교부, 韓 사드배치 임박 보도에 “중단하고 철수하라” 촉구(연합뉴스)
	9.7		中, 한국 사드배치 겨냥 “북핵같은 악성종양 될 것” 맹비난(연합뉴스)
			중국 외교부, 어제 김장수 주중대사 초치...사드배치 항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9.3	강경화 “강력한 제재 공조”...고노 “北 대가 느끼게 해야”(연합뉴스)	
	9.4	文 대통령-아베 총리, 20분간 통화... “지금과는 차원 다른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필요”(중앙일보)	
	9.6	한일 국방장관, 전화협의...“北 핵위협 대응 한미일 긴밀협력”(연합뉴스)	
	9.7	한일 외교장관 “강력한 대북제재 중·러 역할 견인 중요”(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9.5		푸틴, 文대통령과 통화서 “북한 문제, 대화로만 해결 가능” 강조(연합뉴스)
	9.6		푸틴 “한국은 러의 아태지역 핵심 파트너 국가...경협 확대 기대”(연합뉴스)
			크렘린궁 “정상회담 후 북핵 관련 한-러 입장 더 가까워져”(연합뉴스)

## 2. 주변국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9.3		中, 美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일정에 반발(연합뉴스)
	9.7	트럼프 "대북 군사행동, 첫번째 선택 아냐"...시진핑과 통화(연합뉴스)	시진핑, 트럼프에 북핵문제 관련 "대화 통한 평화적 해결" 강조 (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9.3	트럼프-아베, 6일새 3번 전화통화..."美, 日과 100% 함께할 것"(연합뉴스)	
	9.4	트럼프-아베 통화..."북한에 전례 없이 강력한 압력 합의"(연합뉴스)	
		美日 외교장관 통화..."원유수출제한 포함 대북 추가제재"(연합뉴스)	
	9.6	美日 국방장관 "한미일 공조로 눈에 보이는 대북압력 계속"(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9.2		크렘린궁 "美 자국 주재 러 공관 폐쇄는 '기습점령' 비난(연합뉴스)
			러 외무부, 美부대사 불러 공관폐쇄 항의(연합뉴스)
	9.4		러시아 "FBI 수색은 외교관 면책 특권 위반"(미국의소리)
			러 외무부, 美의 자국 공관 폐쇄 강력 항의..."노골적 적대행위"(연합뉴스)

	9.6	푸틴, 마-러 '외교분쟁' 관련 "트럼프와 타협책 찾길 희망"(연합뉴스)	
		미-러 외무, 전화로 한반도 문제 논의...“北핵실험 후 정세 평가”(연합뉴스)	
	9.7	러 “美 제출 안보리 대북 결의안 러-中 로드맵에 부합해야 지지”(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일본</b>
중일 관계	9.5		日관방 “북핵도발·한미군사훈련 쌍중단 제안은 부적절”(연합뉴스)
	9.6		日, 中겨냥 센카쿠 방어전선 강화...인근에 사격훈련장 설치 (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러시아</b>
중러 관계	9.3	시진핑·푸틴 샤먼서 회동...‘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천명(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일본</b>	<b>러시아</b>
일러 관계	9.8	아베 “푸틴과 꼭 평화조약 서명할 것”...재임중 체결 의지 강조 (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7. 9. 3.

##### ■ 트럼프 “한미FTA 폐기 여부 내주 참모들과 논의하겠다” 파문(연합뉴스)

- 허리케인 ‘하비’ 수해를 본 텍사스 주 휴스턴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폐기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힘.
-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FTA에 조건을 재협상하기 위해 협정에 남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는 많이 진척됐으며 공식적인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수 있다”고 WP에 밝힘.
- 이와 관련, 백악관은 WP에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시점에서 발표는 없다”고 발언함.

2017. 9. 4.

##### ■ 힐러슨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취할 것”…한미외교장관 통화(연합뉴스)

- 렉스 힐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해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함.
- 힐러슨 장관은 이날 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25분간 진행한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기초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한미가 국제사회를 이런 방향으로 견인해나가는 데 있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힘.
- 두 장관은 양국 유엔 주재 대표부를 통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신규 안보리 결의 도출을 위해 추가적인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으며, 유엔총회 등 향후 예정된 다양한 다자 및 양자 계기를 통해 양국의 입장을 보다 구체화해나가기로 함.

##### ■ 한미·한일 북핵대표 연쇄통화…‘단호한 대응’ 공감(연합뉴스)

- 한·미, 한·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후 연쇄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4일 밝힘.

-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긴급 통화를 갖고, 북한 핵실험 관련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당국자는 전함.
- 연쇄 전화 협의에서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은 핵실험 감행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긴밀한 한미일 공조 하에 강력한 제재 요소를 담은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 등을 포함한 단호한 대응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함.

#### ■ 한미 국장급 확장억제협의체 매년 개최…핵우산 논의 정례화(연합뉴스)

-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억지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포함하는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매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한미 양국은 4일 양국 외교·국방(2+2) 당국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를 정례화하기 위한 구체적 운영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발표함.
- 합의에 따라 한미는 EDSCG를 차관급이 나서는 고위급 회의와 국장급 본회의로 구분, 고위급 회의는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개최하고, 국장급 본회의는 매년 개최하기로 함.

2017. 9. 5.

#### ■ 文대통령-트럼프, 미사일지침 탄두중량 제한 전격 해제 합의(연합뉴스)

- 한·미 정상은 4일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함.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함.
-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미사일 탑재능력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한국의 계획에 대해 원론적인 승인을 했다”고 밝힘.

■ **트럼프 “한국에 수십억달러 무기판매 승인”…나흘간 2번 강조(연합뉴스)**

-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고 밝혔다.
-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에 관한 성명을 내 이같이 전했다고 AFP 통신과 미 CBS 방송 등 외신들이 보도함.
- 그러나 백악관은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는 설명하지 않음.

■ **송영무, 美 태평양함대사령관 면담…“북에 실질적 군사대응”(연합뉴스)**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5일 한국을 방문 중인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을 만나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국방부는 이날 “송 장관은 오늘 오후 스콧 스위프트 사령관과 면담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동맹 차원에서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함.

2017. 9. 6.

■ **美USTR 대표 “한미 FTA 관련 문제 다룰 개정협상 희망”(연합뉴스)**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개정 협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함.
- 멕시코를 방문 중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현대화’와 관련한 2차 협상을 마무리한 이날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 그는 한미FTA가 종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이 있다”며 “한국과 성공적인 논의를 하고 우리 관점에서 보는 그 협정의 문제가 잘 풀리기를 바란다”고 답변함.

■ **한미일 국방당국 北핵실험 대응 화상회의…“최대한의 압박”(연합뉴스)**

-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이 6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화상회의를 하고

-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최대한 압박하기로 함.
-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3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오전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힘.
  - 국방부는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결국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포기를 결심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나가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전함.

2017. 9. 7.

■ **한미 국방장관 “北 도발억제 연합훈련·전략자산 정례배치 강화”(연합뉴스)**

-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배치를 강화하기로 함.
-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5일 밤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6일 한미 양국 국방부가 전함.
- 국방부는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동맹의 평가와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해 한반도 및 주변에서의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과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백악관 “한미FTA 폐기 논의 당분간 안해”...의회에 보고(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관련한 논의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알렸다고 6일(현지시간) 미 폭스비즈니스 등 외신들이 보도함.
- 폭스비즈니스는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관계자들이 5~6일 의회 일부 중진 의원에게 한미 FTA 폐기가 더는 시급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함.
- 앞서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도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위스콘신)을 비롯한 의회 핵심인사들이 정부 내에서 한미 FTA 철회 문제를 당분간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함.

## 나. 한·중 관계

2017. 9. 4.

## ■ 강경화, 왕이 中외교부장과 통화…북핵실험 대응 협의(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관련해 4일 전화 통화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함.
-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 장관과 통화했다”며 “주로 북한의 6차 핵실험(3일) 관련 상황 평가와 향후 대응방향 위주로 협의했다”고 전함.
- 당국자는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함.

2017. 9. 6.

## ■ 中외교부, 韓 사드배치 임박 보도에 “중단하고 철수하라” 촉구(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배치를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함.
- 경샹(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유관 행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미국의 한국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확고하다”고 밝힘.
- 또한 “중국 측은 한미가 중국 등 지역 국가의 안전 이익과 우려를 존중해 즉각 유관 배치 과정을 중단하고 유관 설비를 철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함.

2017. 9. 7.

## ■ 中, 한국 사드배치 겨냥 “북핵같은 악성종양 될 것” 맹비난(연합뉴스)

- 주한미군이 7일 오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성주 사드 기지로 추가 반입한 데 대해 중국 주요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며 강력히 비난함.
- 중국 관영 매체 중앙(CC)TV는 지난 6일 중국 외교부 경샹(耿爽) 대변인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결연히 반대하면서 배치를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강력한 사드 반대 입장을 보도함.
-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별도 사평(社評)을 통해 “한국의 사드배치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남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치는 행위로서 사드가 북핵과

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종양이 될 것”이라며 강력 비난함.

■ **중국 외교부, 어제 김장수 주중대사 초치…사드배치 항의(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7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에 대한 임시 배치를 완료한 것과 관련해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한 것으로 확인됨.
- 경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이 끝난 뒤 연합뉴스 기자가 김장수 대사 초치 여부를 묻자 “이미 어제 김 대사를 불러 사드 관련 항의 했다”면서 “항의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다”고 밝힘.
- 그는 “중국 측은 미국의 한국에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한미 양국은 중국 등 지역 국가의 안전 이익과 우려를 중시해 유관 배치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유관 설비를 촉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함.

## 다. 한·일 관계

2017. 9. 3.

■ **강경화 “강력한 제재 공조”…고노 “北 대가 느끼게 해야”(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후 긴급통화를 갖고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대북 공조 추진에 뜻을 함께함.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진행한 전화통화에서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가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더불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 향후 책동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6~7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및 유엔 총회(뉴욕) 등 계기에 양국간 각급에서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함.

2017. 9. 4.

■ **文 대통령-아베 총리, 20분간 통화…“지금과는 차원 다른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필요”(중앙일보)**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전화 통화를 통해 전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함.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북한 핵실험이 한국과 일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

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설명함.

-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핵실험이) 과거 핵실험보다 몇배 더 위력을 보였다는데, 북한 스스로 ICBM 수소탄 장착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북한이 실감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함.

2017. 9. 6.

■ **한일 국방장관, 전화협의…“北 핵위협 대응 한미일 긴밀협력”(연합뉴스)**

- 한일 양국 국방장관이 6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계속하기로 함.
- 국방부는 이날 “송영무 장관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오노데라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과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 핵실험 관련 상황 평가 및 양국간 대북 공조를 확인했다”고 밝힘.
-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도발 행위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함.

2017. 9. 7.

■ **한일 외교장관 “강력한 대북제재 중·러 역할 건인 중요”(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7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한 제재 요소를 포함한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함.
-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 太郎) 일본 외무상은 7일 오전 한일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겸해 진행한 회담에서 대북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두 장관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 및 6차 핵실험으로 더욱 엄중해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에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

## 라. 한·러 관계

2017. 9. 5.

### ■ 푸틴, 文대통령과 통화서 “북한 문제, 대화로만 해결 가능” 강조(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한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의 대화와 외교적 해법을 재차 강조함.
- 크렘린 궁은 두 정상 간 전화통화와 관련해 “러시아 측은 지극히 복잡한 (북한 관련) 상황은 대화 재개와 광범위한 정치적·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전함.
- 또 두 정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들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핵 비확산 체계를 약화하며,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북한의 행동들을” 결연히 비난했다고 크렘린 궁은 설명함.

2017. 9. 6.

### ■ 푸틴 “한국은 러의 아태지역 핵심 파트너 국가··경협 확대 기대”(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한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한국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한 데 대해 만족을 표하면서 앞으로 양국 경제 협력이 한층 활성화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힘.
- 푸틴은 러시아 정부가 역점을 두는 극동 개발과 관련, 한국 기업들이 극동 지역 부두 현대화, 북극 항로 개발 등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으며, 농업 분야 협력도 중요하다면서 이 분야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함.
- 푸틴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도 여전히 관심이 있다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공급을 위한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남·북·러 3국 철도망 및 전력망 통합 등을 거론함.

### ■ 크렘린궁 “정상회담 후 북핵 관련 한·러 입장 더 가까워져”(연합뉴스)

-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북핵 관련 입장이 한층 가까워졌다고 크렘린궁 고위인사가 6일(현지시간) 밝힘.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외

교수석)은 이날 제3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뒤 이같이 설명함.

- 우샤코프는 ‘회담을 통해 북핵 관련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 도출됐는가’라는 질문에 “양국 정상은 (최근) 전화통화로도 대화를 했고 오늘도 대화를 나눴다”며 “공통된 시각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함.

## 2. 주변국정세

### 가. 미·중 관계

2017. 9. 3.

#### ■ 中, 美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일정에 반발(연합뉴스)

- 3일 중국 관영 환구망에 따르면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향후 수개월내에 남중국해에서 2-3차례 ‘항행의 자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보도함.
- 환구망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한 일정표를 마련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항해의 자유’는 이전과 달리 더욱 제도화, 상설화되고 있다고 우려함.
- 또 향후 계획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는 해군 함정 뿐 아니라 전투기 비행까지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설명함.

2017. 9. 7.

#### ■ 트럼프 “대북 군사행동, 첫번째 선택 아냐”...시진핑과 통화(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사행동을 제외한 다른 압박 수단을 먼저 취할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시 주석이 나와 100% 동의한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매우, 매우 솔직하고 매우 확고한 통화를 했다”고 전함.
- 아울러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를 매우 강하게 지지했으며, 우리는 다른 것들도 얘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어떤 일들을 곧 다시 얘기할 예정이다. 그것이 해결될지 지켜볼 것”이라고도 함.

■ **시진핑, 트럼프에 북핵문제 관련 “대화 통한 평화적 해결” 강조(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북핵해법을 논의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함.
- 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힘.
- 시 주석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에 의존해야 하며 대책을 종합해 해결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국과 함께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 방안을 조속히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함.

나. 미·일 관계

2017. 9. 3.

■ **트럼프-아베, 6일새 3번 전화통화-“美, 日과 100% 함께할 것”(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오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결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함.
-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하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반복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뜻을 같이함.
- 아베 총리는 이날 통화 뒤 기자들에게 “최신 정세의 분석과 그 대응에 대해 다시 협의했다”고 밝혔으며, 아베 총리에 따르면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100% 일본과 함께한다”고 발언함.

2017. 9. 4.

■ **트럼프-아베 통화-“북한에 전례 없이 강력한 압력 합의”(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3일 심야에 전화 통화를 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함.
- 아베 총리는 오후 통화 뒤 기자들에게 “국제사회가 북한에 전례 없이 강력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힘.
- 백악관도 양국 정상 간 통화 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미국은 본토와 동맹국 방어를 위해 “외교, 재래식(무기),

핵능력 등을 전방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함.

■ **美日 외교장관 통화…“원유수출제한 포함 대북 추가제재”(연합뉴스)**

- 렉스 텔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4일 오전 통화를 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를 추진하기로 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압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결의를 채택하도록 연대해 대응하기로 함.
- 교도통신은 미국과 일본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금지·제한을 포함해 북한에 한층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2017. 9. 6.

■ **美日 국방장관 “한미일 공조로 눈에 보이는 대북압력 계속”(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6일 전화 통화를 하고 6차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눈에 보이는 형태의 압력을 계속 가하기로 함.
- 방위성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과거 핵실험에 비해 폭발력이 컸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확대억제를 포함해 일본을 확실하게 방위하겠다고는 강력한 결의를 재차 표명함.
- 두 사람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압력을 계속 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향후 양국이 긴밀히 연대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확인함.

#### 다. 미·러 관계

2017. 9. 2.

■ **크렘린궁 “美 자국 주재 러 공관 폐쇄는 ‘기습점령’ 비난(연합뉴스)**

- 미국이 자국 내 러시아 공관 시설 여러 곳을 폐쇄 조치한 데 대해 러시아 크렘린 궁이 ‘기습점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함.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 1일(현지시간) “미국이 다시 우리 총영사관 등을 폐쇄했다”면서 “외교적 불가침권이 적용되는 우리 자산 5개 시설이 탈취당했으며 기습점령에 가깝다”고 지적함.
- 이어 미국 측의 러시아 외교 시설 추가 폐쇄 조치로 양국 관계가 긴장될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미국의 행동에 대한 대응을 차분히 숙고할 것”이라고 경고함.

#### ■ 러 외무부, 美부대사 불러 공관폐쇄 항의(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2일(현지시간) 자국 주재 미국대사관 부대사를 불러 미국의 러시아공관 폐쇄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함.
-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모스크바 미 대사관의 앤서니 갓프리 부대사 겸 총영사를 초치(招致)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러시아 외교 자산에 대한 미국의 불법 수색 계획은 전례가 없는 적대적 행위”라고 주장함.
- 외무부는 “미국 내 러시아 공관들은 러시아의 자산이며 외교적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함.

#### ■ 러시아 “FBI 수색은 외교관 면책 특권 위반”(미국의소리)

- 러시아 외무부가 미 연방수사국(FBI)의 샌프란시스코 주재 러시아 영사관과 외교관 거주시설 수색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 성명을 통해 “미 정부 당국의 요구는 러시아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밝힘.
-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 특수기관(FBI)이 토요일(2일) 샌프란시스코 영사관과 외교관 아파트 등을 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비난함.

2017. 9. 4.

#### ■ 러 외무부, 美의 자국 공관 폐쇄 강력 항의…“노골적 적대행위”(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이 지난달 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워싱턴과 뉴욕의 무역대표부 등 러시아 공관 시설을 폐쇄한 데 이어 이들 건물 수색을 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함.
- 외무부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전날 러시아의 자산이자 외교적 면책특권을 가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워싱턴 무역대표부 등이 미국 측에 의해 점령당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노골적인 적대 행위이며 외교 및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난함.
- 외무부는 “미국 당국이 정신을 차리고 러시아 외교시설을 즉각 반환하길 바란

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양국 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은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2017. 9. 6.

■ **푸틴, 마-러 ‘외교분쟁’ 관련 “트럼프와 타협책 찾길 희망”(연합뉴스)**

-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중국 샤먼(廈門)에서 막을 내린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모임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마-러 외교분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러시아와 미국,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그(트럼프)와 타협책을 찾길 바란다”고 답변함.
- 푸틴은 미국이 지난달 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워싱턴과 뉴욕의 무역대표부 등 러시아공관 시설을 폐쇄한 데 이어 이 시설들을 수색한 데 대해 제소 방침을 밝힘.
- 그는 “미국 측은 러시아가 자기 자산을 이용하는 권리를 박탈했다. 이는 명백히 러시아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법원 제소를 검토하도록 (우리) 외무부에 지시할 계획”이라고 발언함.

■ **마-러 외무, 전화로 한반도 문제 논의…“北핵실험 후 정세 평가”(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힘.
- 외무부는 이날 언론 보도문을 통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렉스 텔러슨 미국 국무장관 간 전화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양측이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교환했다”고 소개함.
- 이어 “라브로프 장관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반대한다는 점을 단호히 밝혔으며, 평화적 사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정치·외교적 수단이 채택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관련국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제를 유지할 것도 촉구했다”고 설명함.

2017. 9. 7.

■ **러 “美 제출 안보리 대북 결의안 라-中 로드맵에 부합해야 지지”(연합뉴스)**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외교수석)

은 7일(현지시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행사장에서 ‘러시아가 안보리 표결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란 질문을 받고 “미국이 제안한 대북 결의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보자”고 답변함.

- 이고리 모르쿨로프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의 대북 결의안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한) 공통의 ‘로드맵’(단계별 구상)을 갖고 있다”며 미국 결의안이 이 구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봐서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함.
- 러-중 로드맵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핵과 미사일의 비확산을 공약하면 한·미 양국도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1단계에서부터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2단계를 거쳐 다자협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 안보체제 등을 논의하는 3단계로 이행해 가는 단계별 구상을 담고 있음.

## 라. 중·일 관계

2017. 9. 5.

### ■ 日관방 “북핵도발·한미군사훈련 쌍중단 제안은 부적절”(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제안한 이른바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5일 부적절하다고 반박함.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법에 위반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일한 사례로 논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함.
- 스가 장관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함.

2017. 9. 6.

### ■ 日, 中겨냥 센카쿠 방어전선 강화··인근에 사격훈련장 설치(연합뉴스)

-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훈련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함.

- 일본 해상보안청은 센카쿠열도 주변 경비의 거점인 오키나와(沖繩)현 미야코지마(宮古島)에 상주하는 해상보안관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낙도 중 최초로 사격훈련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해상보안청은 2018년도 예산에 2억 5천만엔(약 25억 7천 875만원)을 들여 이시가키섬 동쪽에 7천㎡ 크기의 사격훈련장을 마련해 영해를 침입한 중국 어선 승무원을 제압하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임.

## 마. 중·러 관계

2017. 9. 3.

### ■ 시진핑·푸틴 사면서 회동…‘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천명(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중국 샤먼(廈門)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함.
-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저녁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샤먼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런 공동 입장을 도출함.
- 양국 정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합의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기로 함.

## 바. 일·러 관계

2017. 9. 8.

### ■ 아베 “푸틴과 꼭 평화조약 서명할 것”…재임중 체결 의지 강조(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재임 기간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일 평화조약을 꼭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개최한 러-일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러-일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화조약 체결”이라면서 “이번에 우리(자신과 푸틴)는 바로 우리 손으로 평화조약에 서명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함.
- 이에 푸틴 대통령도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평화조약 체결 문제와 남쿠릴열도

(쿠릴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조약 체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음.

# IV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9.7	올해 말, 쿠웨이트 내 북 노동자 대다수 철수 전망(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9.5	북, 핵실험 성공 빌미로 주민통제 강화(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9.3	북한인권법 시행 1년...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해(연합뉴스)
	9.4	정부, 대북 인도지원·北인구센서스 지원 보류(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9.4	중국, 지난 두 달 최소한 41명 탈북자 구금(자유아시아방송)
		중국이 탈북자 복송 중단 안하면 대사관앞 탈북소녀상 건립(연합뉴스)
	9.6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앞 시위 탈북민 北외교관과 몸싸움(연합뉴스)
	9.7	북한 당국 지나친 조사에 탈북자 가족들 고통 호소(자유아시아방송)
대북지원	9.5	UNICEF, 2017 상반기 북 영양실조 아동 4만 명 치료(자유아시아방송)
	9.7	WFP "7월 대북 식량지원, 상반기 대비 10% 감소"(미국의소리)
		22년째 北원조 왜... 스위스 "도움 필요한 곳에 있을 뿐"(연합뉴스)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9. 7.

### ■ “올해 말, 쿠웨이트 내 북 노동자 대다수 철수 전망”(자유아시아방송)

-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설 땅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가운데, 조만간 쿠웨이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도 모두 빠져 나갈 것으로 보임. 쿠웨이트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수는 대략 1천 800명에서 2천 500명 사이임.
- AP통신은 이달 초 보도를 통해 쿠웨이트에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 수가 2천 500명이라고 밝혔으며, 쿠웨이트 주거관리국은 1천 800명이라고 공식 발표함.
- 이 소식통은, 쿠웨이트에 파견돼 있는 북한 건설 회사들은 대북제재로 인한 일련의 상황에 대체로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귀국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함. 이미 노동허가 기간이 끝난 노동자 상당수가 북한으로 되돌아갔으며, 지금도 조금씩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함.
-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현재 체류 인원의 80% 정도는 쿠웨이트를 빠져 나가고, 늦어도 내년 4~5월쯤이면 쿠웨이트 내 모든 북한 회사가 철수할 것으로 내다 봄.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9. 5.

### ■ 북, 핵실험 성공 빌미로 주민통제 강화(자유아시아방송)

- 중국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내부결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핵실험 성공을 이유로 각종 축하집회를 조직하는 등 주민통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함.
- 북한은 해마다 정치적 계기를 맞아 수많은 군중행사를 조직해옴. 하루가 멀다하고 제기되는 정치행사에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힘.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3일 “중앙에서 전국의 각 기관들에 오후 3시에 중대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지시를 전달했다”면서 “전체 인민들은 오후 3시부터 지정된 장소에 집결해 중대발표를 시청하라는 게 지시의 내용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소식통은 “중대방송 발표소식에 주민들은 인근지역에 마련된 회의장이나

영화관에 모여 중대방송을 시청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생업을 중단하면서 까지 중대방송시청을 강요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언급함.

- 소식통은 또 “주민들은 중대발표라는 것이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 하겠냐”면서 “핵시험 성공을 선전하느라 한창 먹고사는 일에 여념이 없는 주민들을 강제로 집결시키는 중앙의 행태는 주민들의 생계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놀음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함.
- 소식통은 이어서 “하루벌이로 살아가는 주민들 입장에서 온갖 정치행사와 중대방송 시청이 생계에 큰 지장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며 “특히 직장에 적지 않은 돈을 바치기로 약정하고 장사에 나선 로동자들은 정치행사 참여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함.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9. 3.

#### ■ 북한인권법 시행 1년…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해(연합뉴스)

-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4일로 1년이 되지만 법안을 이행할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음.
-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돼 있음.
- 통일부 관계자는 3일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해야 북한인권법 시행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업이 인권재단을 통해서야 가능하다”고 말함.
-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사진 구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2017. 9. 4.

#### ■ 정부, 대북 인도지원·北인구센서스 지원 보류(연합뉴스)

-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전해짐.
- 통일부 당국자는 4일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태도와 국제사회 동향, 국민 반응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다른 당국자도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당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함.
  -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과 영유아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를 협의해 왔음.
  - 정부는 당초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티덤가디언(UFG) 연습이 8월 말 종료된 뒤 9월에는 이들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지원을 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짐.
  -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보수정부 때도 꾸준히 계속됐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임.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9. 4.

##### ■ 중국, 지난 두 달 최소한 41명 탈북자 구금(자유아시아방송)

- 중국 당국이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려는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3일 말함.
-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과 북한내 인사들과 접촉을 유지하는 한국내 탈북자들과 활동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최소한 41명의 탈북자들과 이들의 탈북을 도와준 숫자 미상의 안내인들을 구금했다고 밝힘.
-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고문과 탄압의 장소로 되돌려보냄으로써 유엔난민협정 비준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법을 명백히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함.
-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이 지난 두 달 간 구금한 탈북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된 약 51명의 탈북자 수에 비하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이라고 말함.
- 한편 지난 5년간 북중 국경지역에는 국경 경비대가 늘어나고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철조망이 더 많이 건설되는 등 보안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덧붙임.

##### ■ “중국이 탈북자 복송 중단 안하면 대사관앞 탈북소녀상 건립”(연합뉴스)

-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가족들이 중국이 탈북자의 강제 복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사관 앞에 ‘탈북소녀상’을 건립하겠다고 밝힘.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은 ‘북한인권법’ 시행 1주년인 4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위에 걸맞게 탈북자 강제 복송을 즉각 중단하고 구금한 탈북민을 석방하라”고 요구함.
- 탈북자 복송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금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이들은 지적함.
- 이어 7월 말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강제 복송된 숫자가 125명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탈북자의 강제 복송을 지속하면 세계적으로 중국의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함.
- 또 주한중국대사관 앞에 탈북소녀상 건립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함.

## 2017. 9. 6.

###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앞 시위 탈북민, 北외교관과 몸싸움”(연합뉴스)

- 북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앞에서 시위하던 탈북민들과 북한 외교관이 몸싸움을 벌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전함.
- RFA는 “지난 4일 미국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앞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탈북민들의 시위가 열렸다”며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와 북한 외교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국제 탈북민 연대 마영애 대표 등 탈북민들은 이날 북한대표부 앞에서 ‘김정은을 처형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임.
- 충돌이 발생하자 5~6명의 뉴욕시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2017. 9. 7.

### ■ “북한 당국 지나친 조사에 탈북자 가족들 고통 호소”(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이 탈북자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면서 탈북자 가족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사법당국의 지나친 소환조사에 일부 탈북자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5일 “최근 국경연선의 보안서들에서 탈북자 가족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주민등록상에 남아있지만 행적이 묘연해진 식구들을 찾아내라고 다그치는 바람에 일부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소식통은 “무산군 보안서가 8월부터 가족 중에 행불자가 있는 주민 수십 명을 모두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불법 손전화를 회수하거나 불법전화 연결로 체포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북자 가족명단을 확보한 것 같다”고 말함.
- 소식통은 또 “최근 보안당국이 국경연선에서 불법 국제전화 연결 브로커들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예고했다”면서 “불법전화 브로커들이 자수하거나 불법전화 이용자 명단을 넘기면 처벌을 면해준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덧붙임.

## 5. 대북지원

2017. 9. 5.

### ■ UNICEF, 2017 상반기 북 영양실조 아동 4만 명 치료(자유아시아방송)

- 유니세프가 최근 ‘북한 2017 상반기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를 공개함. 유니세프는 올해 상반기 전 지역의 90%인 189개 시와 군에서 ‘지역 중심 영양실조 관리사업’을 진행함.
-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취약계층의 영양과 보건 상태가 더욱 악화했다고 밝힘. 구체적으로, 1천 8백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20만여 명의 아동이 영양실조 상태임.
-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지역 중심 영양실조 관리사업’으로 4만여 명의 중증 영양실조 아동과 급성 영양실조 아동을 치료했다고 밝힘. 또 아동 170만여 명에게 비타민A와 구충제, 영양 가루를 지원함.
-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금 부족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70%만 확보할 수 있었다고 유니세프는 밝힘. 유니세프는 올해 북한 아동 490만여 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두 1천 6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390만 달러만이 모금됐으며, 국제사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함.

2017. 9. 7.

### ■ WFP “7월 대북 식량지원, 상반기 대비 10% 감소”(미국의소리)

- 북한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 7월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가 올 상반기 평균 지원 양에 비해 10% 감소함.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도 7월 중순 주민

한 명 당 하루 300g로 크게 줄어듦.

- 세계식량계획은 6일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7월 한 달 동안 탁아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56만 9천여 명에게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 등이 함유된 영양강화식품 1천 559t을 지원했다고 밝힘.
- 세계식량계획은 이 기간 탁아소 어린이 한 명 당 하루 영양강화식품 66g과 영양과자 40g, 임산부와 수유모에게는 132g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힘.
- 이는 올해 상반기 취약계층 64만여 명에게 평균 1천 733t의 식량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10% 감소한 규모임.
- 특히 매달 1백만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함.

#### ■ 22년째 北원조 왜… 스위스 “도움 필요한 곳에 있을 뿐”(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여섯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가운데 스위스 공영방송 SRF가 스위스 연방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소개함.
-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우려하며 국제사회와 북한의 중재 역할을 자청함. 스위스는 1995년부터 대북 원조사업을 하고 있음.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평양에 정부사무소까지 두고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국가는 스위스가 거의 유일함.
- 정년 퇴임을 앞둔 토마스 피슬러 개발청 평양 사무소장은 4일(현지시간) 이뤄진 SRF 인터뷰에서 대북 지원 이유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있는 것 뿐이다”라고 말함.
- 그는 최근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스위스에서도 대북 원조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활동을 정당화해야만 할 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도주의 활동은 자주 정치적 맥락 속에 놓인다. 북한을 돕는 게 우리의 의무는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함.